

# 돈만 사라진 주택조합아파트... 서민 '아우성'

### 광주 학동 조합비 27억 가로철편 대행사 대표 사기혐의 구속 운암동선 317명 129억 피해 수사... 여수서도 350명 호소 곳곳 피해 속출 속 조합측은 "계약금·홍보비 등으로 썼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추진 대행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한 뒤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받아 토지구입 계약금·홍보비 등으로 써버려 정작 착공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동구 학동 조선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인근 미림마을에서 지역 주택조합 사업(광주일보 2017년 8월2일 자 6면)을 추진한다며 주민 75명에게 27억원의 조합비를 받아 가로철편 협의(사기)로 지역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하고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2017년 1월 K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3만1859㎡ 부지에 526세대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조합원을 모집, 75명에게 총 27억원을 받아 가로철편 협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동구가 2014년 6월부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4만3095㎡) 대상지의 일부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2월 주택홍보관을 열고 현수막을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비구역 세대주 50%의 승낙만 받으면 사업 변경이 가능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려 했다"며 "계약금은 홍보비, 설계비, 토지구입 계약금으로 다 썼지만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조합원은 241명, 계약금은 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자,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9월 복구 운암동 황계마을에서 추진된 운암황계지역주택조합도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합 업무대행사는 S건설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며 조합원 317명을 모집해 각 490만원씩 총 129억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계약금이 2000만원 밖에 남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건설사와 대행사측에 문의했으나 "분양대행 수수료, 홍보비 등으로 소진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12월 전 조합장, 대행사 대표, S건설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화장동주택조합에서도 계약금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합원 40명은 최근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를 사기 혐의로 여수경찰에 고소했다.

화장동주택조합은 화장동 무선지구 일대에 22~30층 558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지난 2015년 9월께 설립했다. 이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부지 소유자는 여수시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했고 지난 2016년 1월 조합측이 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심판에서도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여수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종상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 3월 여수박람회장에 주택홍보관을 설립하는 등 조합원을 꾸준히 모집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합원은 350여명, 계약금은 100여억원에 이른다. 황계주택조합 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은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가입했



더 빨리 뛰어라 '2018 소방전술 경연대회'가 29일 광주시 광산구 소방학교에서 열렸다. 경연에 참가한 대원들이 소방호스를 설치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최강 화재진압팀을 가리기 위해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

는데, 건설사측은 모든 착하고 조합은 합법적으로 돈을 썼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피해자는 있는데 기해자는 없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당원명단 유출' 수사 결과 빠르면 다음주 나올 듯

### 경찰 "큰 줄기 수사 마무리... 검찰 판단만 남아"

이르면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단 유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큰 줄기(수사)는 마무리됐으며, 현재 검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조만간 의미 있는 (중간)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경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민주당 광주시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 광주시당 조직국장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서 일부 당원의 명단을 확보했다.

### 전남지체장애인협 압수수색 경찰, 보조금 횡령 의혹 수사

경찰이 보조금 횡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9일 전남지체장애인협회를 압수 수색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남 목포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협회에서 보조금을 받아 진행한 여러 사업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1)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2)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됨)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A.P.T · 주택 · 공장 · 기타 등

- 1)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 2)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9천3백 → 최저 1억7백
- 3) 남구 주월동 (무등파크) 25평 감정 1억4천 → 최저 9천8백만
- 4)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5)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 6)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7)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8)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9)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10)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1)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2)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3)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

## “구례군 발간 사진집 역사 왜곡했다”

### 종교단체 반발...군수 등 2명 고소

#### 郡 “사진집 고친 뒤 재발송 방침”

구례군이 최근 발간한 사진집 ‘과거보러 가는 길’의 역사적 사실 왜곡과 관련 지역 종교단체가 관련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지리산 선교유적지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활동하는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보존연합)은 “과거보러 가는 길” 발간 책임자인 단체장과 작가 정모씨 등 2명을 ‘지리산 노고단 수양관(예배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순천지검에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진집은 1968년부터 1990년까지 구례지역 옛 모습을 기록한 사진집으로 구례군에서 김보 공무원과 정보작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구례군은 이양장본 사진집을 총 1000권 발간해 전국 기관단체와 향우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보존연합과 지리산 기독교선교유적지 관련 유족인 인요한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 소장 등은 사진집에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고단 산장 가기 직전 왼쪽에 자리한 선교사 별장(216쪽)이라는 사진설명에서 ‘미개한 한국민’에게서 향토병 율을까봐 멀찌감치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행복을 향유한 명백한 증거라고 적시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의도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오류를 확인하고 집필자와 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발송된 사진집은 회수조치에 들어갔고, 왜곡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단체가 원하든대로 새로 고친 뒤 재발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종교단체의 사과요구와 관련해서는 군수와 협의가 끝나는데로 시기와 장소를 잡아 직접사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전공노 9년만에 합법노조 인정

그동안 '범외노조'로 분류돼왔던 전국 공무원노조(전공노)가 규약을 개정해 설립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설립 이후 범외노조로 있던 전공노가 지난 26일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합법적인 노조자

격을 인정받아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따른 노조 전임 활동 등이 가능해졌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신고필증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도 아닌데 정말 어렵게 인정됐다”면서 “기쁜 마음도 일부 있지만 한국 노동환경의 현실을 보여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

## “폭스바겐 차량 교체명령 정부가 내릴 법적 의무 없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장치가 설치된 폭스바겐·아우디 자동차에 대해 정부가 자동차 교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법적 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29일 정보씨 등 3명이 환경부

장관의 자동차 교체명령 불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현재는 “정부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추상적 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교체명령이라는 구체적인 특정한 작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진표기자 lucky@

## 익명의 기부천사 “소아암 환자 위해 써 달라” 500만원 기탁



익명의 기부천사가 소아암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전남대병원에 500만원을 기탁.

29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50대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이 지난 16일 오후 이 병원 6동 7층 공공보건의료사업실에 찾아와 직원에게 “어려운 소아암 환자 치료에 써달라”며, 5만원권 100장이 담긴 흰봉투를 건넸다는 것.

병원측에서 이름, 주소, 배경 등

을 물었지만 기부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떠났는데,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기부자가 끝없는 자라림에 표정이 어두웠던 점으로 볼 때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 투병 중인 것으로 짐작할 뿐”이라며 “익명 기부를 받은 것은 처음이며, 소중한 뜻을 받들어 학마을봉사회에 전달하는 한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아암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태겠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